민주 민심왜곡 '동원경선' 어떻게 막을까

자격 박탈·공천 배제만으로 역부족

공천심사 강화·여론조사 도입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민주통합당이 '개혁 공천'의 척도로 내세웠던 국민 경선이 결국 선거인단 대리 접수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동구에서의 투신자살 사태를 부르는 등 '동원 경선'의 함정에 빠졌다.

동원 경선은 각종 논란과 함께 민심의 왜곡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 약화와 호남 정치권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동원 경선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역 실사와 함께 공천 심사 강화, 여론조사 도입 등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 경선의 함정**=국민 경선이 선거인단 대리 등록 등 동원 경선의 함정에 빠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기본 룰인 국민경선 시행세칙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경선 시행세칙은 선거인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접수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절차만 규정했을 뿐 특정 IP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특정 예비후보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대리 접수를 해도 중앙당에서는 알 수가 없다.

즉,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매개로 얻어낸 지역 유권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인터넷으로 대리 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유권자의 휴대전화를 인증 번호를 보내면 이를 다시 받아 입력하는 방식인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선거인단 대리 접수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선거인단 대리 등록의 이면에는 공공연한 금품 제공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심 왜곡 대책은**=선거인단 대리 등록을 통한 사실상의 동원 선거는 심각한 민심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호남 지역의 경우,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질 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민주통합당은 '동원 경선'에 따른 민심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후보자격 박탈과 공천 배제 등의 방침을 정했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선거인단 대리 등록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대리 등록 의혹이 있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천 방식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 선거인단 경선을 고집하기 보다는 논란이 있는 지역에는 공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가미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인단 대리 등록 의혹이 있는 지역에서 국민 경선을 고집할 경우, 또 다른 소모적 논란과 함께 민심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공심위 차원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함께 여론조사 방법을 부분적으로 도입, 지역민의 의사를 묻는 공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투신 자살'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명숙 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리등록 드러날땐 사실상 경선 불가

■ 민주, 참극 부른 광주 동구 후보선출 어떻게

이병훈·정영재, 선거운동 잠정 중단 자숙 촉구

민주통합당이 국민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의 총선 후보를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 것인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민주통합당은 선거인단 모집을 중단한 가운데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제시된 이후, 최종 공천 방법을 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선거인단 경선은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투신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모집된 선거인단으로 국민 경선을 치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관권 및 금권을 매개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인단 대리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판명날 경우, 선거인단 경선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 중앙당에서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지역 민심의 반영이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동구 지역민에 대한 여론조사와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후보 선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선거인단 모집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병훈·정영재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27일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이병훈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의 공천 혁명을 퇴색시키고, 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동구 예비후보들의 자숙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관위나 검찰, 중앙당의 조사과정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후보가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동구를 '사고 지구당'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투신사건' 진상조사 돌입

민주통합당은 27일부터 광주 동구 선거인단 모집 경선과정 중 발생한 '투신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정장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서정표 의원과 중앙당 부총장, 법률위원회 변호사, 당 실무자 2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들 중 중앙당 김태균 국제국장과 조영민 부장 등 당 실무자 2명은 이날 오후 광주에 내려와 본격적인 진상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정 위원장 등은 28일 광주에 도착해 이들과 합류할 계획이다.

이날 광주를 찾은 김 국장은 "1차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정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조사단장 등 조사단이 모두 합류하면 선관위와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한명숙 대표가 밝힌 대로 조사결과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30여년 공직생활 해온 '동구 토박이'

■ 숨진 조씨는 누구

선관위의 단속 중 투신 자살을 한 조모(65) 전 동장은 장흥 출신이지만, 30여 년 간 동구청 세무과 등에서 공직생활을 해온 사실상 '동구토박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과 2008년 계림동 동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직했고, 곧바로 계림1동 자치위원, 계림동 꿈나무 도서관 명예관장으로 활동해 왔다. 조씨는 비록 명예직이긴 하지만,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서관리 등을 배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대단한 열정을 보여줬다고 주변 공무원들은 전했다.

올해 1월 명예 관장직은 현직 동장이 맡기로 함에 따라 조씨는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일당 2만7000원을 받고 관장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동구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조씨가 자치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다 동구의회 모 의원과 가까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선거인단 모집 의혹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꿈나무 도서관 운영은 무기 계약직 직원과 청원경찰, 자원봉사 2명이 출근 운영하고 있다"라며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은 제외하고 365일 운영함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일요일이고 자원봉사자들도 출근해 있어서 선거인단 모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은 27일 조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선관위의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숨진 조 관장이 위협감을 느낄 수 있을만한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 관장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선관위 조사원이 상의와 소지품을 압수했다"며 "조 관장이 사무실을 빠져나간 직후 선관위 조사관 1명이 따라나섰지만 곧바로 투신했다"고 말했다.

또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조 관장이 5층 계단 창문을 뜯어내고 신발을 벗어놓은 채 투신한 것으로 볼 때 타의에 의한 추락이나 피신을 위한 도피 과정의 실족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도덕성' '참신성' 웃기는 얘기였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